

문 1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사무 감사권
- ② 선결처분권
- ③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
- ④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의 의결권

난이도 하

해설 및 정답

①③ O 행정사무 감사권과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다.

지방자치법 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
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X 선결처분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닌,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.

동법 제109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(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)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(先決處分)을 할 수 있다.

④ O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다.

동법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
정답 ②

문 2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규정된 사무배분 원칙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경합의 원칙
- ② 중복배분의 원칙
- ③ 종합성의 원칙
- ④ 민간참여 최소화 원칙

난이도 하

해설 및 정답

①② X 지방분권법은 경합 또는 중복배분의 원칙이 아닌, **비경합 및 중복배제의 원칙**을 규정하고 있다.

지방분권법 제9조(사무배분의 원칙)

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·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,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.

③ O 지방분권법은 **종합성의 원칙 및 포괄성의 원칙**을 규정하고 있다.

동법 제9조(사무배분의 원칙)

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**종합적으로 처리**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**포괄적으로 배분**하여야 한다.

④ X 지방분권법은 민간참여 최소화 원칙이 아닌,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**국가와 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**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.

동법 제9조(사무배분의 원칙)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**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**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**관여를 최소화**하여야 하며,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.

정답 ③

- 문 3. 라이트(Wright)의 정부간 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내포권위모형(Inclusive Authority Model)에 의하면,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동시에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며,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된다.
  - ② 분리권위모형(Separated Authority Model)에 의하면,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독자적인 사무영역과 처리권능을 지니고 있으며, 상호 협력을 할 필요도, 상호의존을 할 이유도 없다.
  - ③ 중첩권위모형(Overlapping Authority Model)에 의하면, 연방 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모두 제한된 권한을 갖고 있으며, 한 정부가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.
  - ④ 분리권위모형(Separated Authority Model)에 의하면,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등한 관계를,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포함 관계를 유지한다.

난이도 하

해설 및 정답

- ① X 내포(포괄)권위형은 연방-주-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속적이고 계층제적으로 보는 모형이다. 반면 정부 간 관계를 경쟁과 협력으로 보거나 합의를 이루는 방식은 중첩권위모형에 대한 설명이다.
- ② O 분리권위모형은 정부 간 관계를 독립적으로 보는 모형으로, 독자적 권한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호협력을 고려하지 않는다.
- ③ O 중첩권위모형은 정부 간 관계를 상호의존적으로 보는 모형이다. 이렇게 상호의존적으로 협력을 하는 이유는 각 정부의 권한이 모두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.
- ④ O 분리권위모형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관계는 독립적이라고 보지만,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된다고 본다.

정답 ①

- 문 4. 자치제도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인구 500만 이상의 시·도는 부시장이나 부지사의 수를 최대 4명 이하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.
  -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, 교육자치, 자치경찰, 자치재정, 감사위원회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.
  - ③ 자치구는 도시계획, 지역경제, 상수도 등에서 시·군과 권한을 달리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.
  - ④ 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두고 있다.

난이도 하

해설 및 정답

- ① X 인구 500만 이상이 아닌 800만 이상의 시·도는, 최대 4명이 아닌 최대 3명까지 부시장이나 부지사를 둘 수 있다.

지방자치법 제110조(부지사·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)

- ①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,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, 시에 부시장, 군에 부군수,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,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2.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: 2명(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② O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(제주특별법)은 특별자치도로서의 제주도에 대한 다양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.
- ③ O 자치구와 사군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이지만,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를 사군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지방자치법 제2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)

-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(자치구)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,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.

- ④ O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(세종시법)은 특별자치시로서의 세종시에 대한 다양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.

정답 ①

문 5. A광역시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의결을 하였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환경부장관은 A광역시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A광역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.
- ③ A광역시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.
- ④ A광역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난이도 중

해설 및 정답

- ①② O 폐기물 관리 정책의 **주무부장관인 환경부장관은 A자치단체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고**, A자치단체장은 이를 받아들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.

지방자치법 제172조(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)  
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·도에 대하여는 **주무부장관이**, 시·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**시·도지사**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,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.

- ③ O

동법 제172조(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)  
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.

- ④ X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. 위법하지 않고 단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동법 제172조(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)  
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정답 ④

문 6. A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내 해안지역의 해수면 매립을 완료하였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.
- ② 관내 해안지역을 매립한 것이므로 매립지는 당연히 A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되지만 몇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.
- ③ A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- ④ 매립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면, 매립된 지역은 A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다.

난이도 상

해설 및 정답

- ① O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지만, **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.**

지방자치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 
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**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.**  
 1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매립지

- ② X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**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** 것이므로 당연히 A자치단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,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 이후에 준공검사 등 행정적 절차가 진행된다.

동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 
 ④ 제3항제1호(매립지)의 경우에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... **행정안전부장관에게**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③ X 행정안전부장관은 **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**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자치단체를 결정한다.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가 아닌 **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**

동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 
 ⑥ **행정안전부장관은 ...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**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,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.  
 ⑧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**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**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**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**

- ④ X 매립지가 속할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므로, 사전에 신고했다고 해서 매립된 지역이 A자치단체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.

정답 ①

문 7.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우리나라의 자치계층은 2계층제를 기조로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단층제를 채택하고 있다.
- ② 우리나라에서 자치계층을 포함한 행정계층은 2~4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.
- ③ 광역시의 경우는 ‘광역시-자치구·군’의 자치 2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.
- ④ 1949년 「지방자치법」 제정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모든 시·도가 지속적으로 자치 2계층제를 유지하고 있었다.

난이도 중

해설 및 정답

- ① O 우리나라 자치계층은 일반적으로 광역-기초의 2계층제(중층제)를 취하고 있지만,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예외적으로 광역자치단체만 존재하는 단층제(1계층제)를 취하고 있다.
- ② O 행정계층은 자치계층의 하부계층으로, 행정계층까지 포함하면 광역-기초의 자치계층 아래에 읍·면·동·리·통의 행정계층이 존재하는 4계층제인 곳이 많다. 또한 특별시-자치구·동과 같은 3계층제, 특별자치시-읍·면·동과 같은 2계층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.
- ③ O 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구를 갖지만,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나 부산광역시 기장군처럼 기초자치단체로서 군을 갖는 경우도 있다.
- ④ X 1961년 5·16 군사정변에 따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에 의한 임명제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중단되었다.

정답 ④

문 8. 「지방재정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②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(年限)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지만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·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 변동되었을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예산을 상호 이체(移替)하여야 한다.

난이도 하

해설 및 정답

① O

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  
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
② O

동법 제42조(계속비 등)  
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(年限)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O

동법 제3조(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)  
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X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상호 이체할 때,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.

동법 제47조의2(예산의 이용·이체)  
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·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(移替)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정답 ④



문 11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의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.
- ②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- ④ 「지방자치법」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난이도 중

해설 및 정답

① O

지방자치법 제6조(사무소의 소재지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·면·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.

② O

동법 제88조(징계의 종류와 의결)

-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 1. 공개회의에서의 경고
  2. 공개회의에서의 사과
  3.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  4. 제명
-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③ O

동법 제80조(자격상실의결)

- ①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④ X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닌,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며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동법 제64조(의결정족수)

-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정답 ④

문 12. 「지방자치법」상 자치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④ 두 지방자치단체를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·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.

난이도 하

해설 및 정답

① X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,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.

지방자치법 제26조(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)

-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.

② O

동법 제26조(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)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.

③ O

동법 제22조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④ O

동법 제25조(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·규칙의 시행)

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·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.

정답 ①

문 13. 「지방세기본법」상 지방세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경기도 안성시 주민인 최모씨가 오늘 아침에 구입한 담배에 부과된 담배소비세는 경기도에 납부될 것이다.
- ② 사업자등록을 하고 승마투표권을 판매한 강원도 강릉시 주민 이모씨에게 부과된 레저세는 강릉시에 납부될 것이다.
- ③ 충청남도 태안군 주민인 강모씨가 오늘 취득한 양식업권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충청남도에 납부될 것이다.
- ④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인 오모씨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는 충청북도에 납부될 것이다.

난이도 중

해설 및 정답

- 도세 : 레저세, 취득세, 지방소비세, 등록면허세
- 시군세 : 담배소비세, 주민세, 소득세, 자동차세, 재산세

- ① X 담배소비세는 시군세이므로, 경기도가 아닌 안성시에 납부된다.
- ② X 레저세는 도세이므로, 강릉시가 아닌 강원도에 납부된다.
- ③ O 등록면허세는 도세이므로, 태안군 주민의 등록면허세는 충청남도에 납부된다.
- ④ X 자동차세는 시군세이므로, 충청북도가 아닌 제천시에 납부된다.

정답 ③

문 14. 지방공무원 제도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임용권자는,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, 그 사람을 직권면직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류를 신설할 수 없다.
- ③ 공무원의 징계,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·결정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임용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.
- ④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, 동료,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난이도 중

해설 및 정답

① O

지방공무원법 제62조(직권면직)  
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  
 3.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

② X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는 여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조례로써 기존의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.

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(공무원의 직급구분 등)  
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·직렬·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.

③ O

지방공무원법 제13조(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)  
 공무원의 징계,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(不作爲)에 대한 소청을 심사·결정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임용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④ O

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(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)  
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, 동료,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정답 ②



문 17.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1949년 「지방자치법」이 제정되면서 시와 군 자치체가 규정되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의해 불신임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기도 하였다.
- ③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기관통합형을 취하였다.
- ④ 「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」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구성되지 않았지만 주민직선의 단체장은 선출되었다.

난이도 하

해설 및 정답

- ① X 1949년의 기초자치제는 시와 군 자치체가 아닌 **시읍면 자치제**였다.
- ② O 1949년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**불신임의결권을 인정**하였으며, 1960년 이후에는 폐지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.
- ③ X 제2공화국이 의원내각제였던 것은 맞으나, 지방의회가 집행기능도 담당하는 기관통합형이 아닌,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분리되는 **기관분리형**을 취했다.
- ④ X 1961년 5·16군사정변에 의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**지방의회가 해산**되고 모든 단체장이 **직선제에서 임명적으로** 바뀌었다.

정답 ②

문 18. 중앙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자치사무에 관한 시·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,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,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난이도 중

해설 및 정답

- ① X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 **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**을 받아야 한다.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다.

지방재정법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 
 ② ...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**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**을 받아야 한다

② O

지방자치법 제169조(위법·부당한 명령·처분의 시정)  
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·도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,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**취소하거나 정지**할 수 있다. 이 경우 **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**에 대하여는 **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.**

③ O

지방재정법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 
 ③ 지 다만,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,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**하는 경우에는 **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**을 받은 후 **지방의회의 의결**을 받아야 한다.

④ O

지방재정법 제60조의6(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)  
 ② **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**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**이행상황을 점검**하거나 **보고 또는 자료제출**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.

정답 ①

